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06일 (화)

제 24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2.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3.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4.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92년 8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 중 행방불명된 박태순 씨 사건의 경우 박 씨의 노동운동 동료에 대한 경찰의 공작색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공작 내용과 박 씨의 내사자료의 열람조차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모 과장은 공식회의 자리에서조차 "보안과 문서고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누가 방문하여도 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 유신철폐 운동을 하다 76년 11월 실종된 경북대 의대생 심오석 씨 사건도 의문사위가 모 경찰청 문서고를 열람하다 관련 파일을 발견했으나 상급청의 공개 거부로 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경찰서 자료 목록을 조사하다 진상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특정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거부했다"며 "과거 국가기관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나서야 할 국가기관에서조차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의문사위가 처한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의문사특별법 제4조는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대부분의 의문사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은폐돼 진상규명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정해지지 못한 채 지금껏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법사위는 의문사위 예산이 행정자치위 소관인 만큼 자신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반려했다. 26일 이 법안은 다시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31일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국회법 제37조는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임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리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4월 총선 전까지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면, 의문사위 활동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개정안이 통과 못하면 조사시한인 올해 6월이 되면 진상규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문사위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기관을 제대로 조사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추모연대 등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2일째 이어오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했던 지난 연말에도 공안탄압의 바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헌 씨가 갑작스레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사만 받으면 잘 처리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에 따라 소환에 응했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에 유치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대의원 서진호 씨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집행부원 김영희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6일 오전 발표된다.

이번 구속 처리에 대해 한신대 대책위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반년이나 지난 사건인데다 양시철 씨의 경우에는 7월경부터 이미 두 차례나 소환에 응했고 이유헌 씨의 경우도 이미 한 차례 소환에 응하였는데도, 신임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구속한 것은 '표적 수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책위 측은 "금속산업연맹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노동자, 농민, 학생의 연대 투쟁을 막기 위한 공안탄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지부 역시 3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집회도 아니며, 이미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경의 건수(?) 채우기 식 처리임이 의심되는 것"이라며 "노동자 탄압정책과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1만 조합원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

<기사 처음으로>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새해가 왔다. 새롭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우중충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 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 단상 앞까지 나와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모습을, 의원직이 걸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들의 강한 반발로 한-칠레 비준안은 유보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라크 파병안, 소파 비준안 등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해 왔던 자들이다. 하지만 신념보다는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국회의원들이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시법 개악안이 상정되었지만 무사히 통과되었다. 일부 소극적인 반대 표시가 있었지만 한-칠레 비준안이나 선거법 통과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악법을 저지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통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강력히 대처했어야 할 국가인권위도 국회의장에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반미집회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이는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앞장서는 시장권력과 주한미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고, 인권은 질식상태에 처했다. 인권운동가들은 '국회가 인권을 짓밟았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해 그 중심에는 노무현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국회의원과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장이다. 사회적 약자가 자기 의사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로도 권력자의 폭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현행 집시법이 만들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개악되더니, 급기야 정권 획득을 둘러싼 더러운 정치인들의 싸움 속에서 '집회·시위 금지법'이 탄생된 것이다. 너나할 것 없이 권력자들은 수십 년간 몸에 밴 독재의 명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를 승배하며 집단적 대물림을 하고 있다.

인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정권은 그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개악 집시법에 불복중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시대의 긴급한 진실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삶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더 이상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두자!

(오두희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강력 한 불복중운동 천명...민주노총도 "불복중 운동과 사회단체와 공동행동 시작할 것"(12.30)

2. 한-칠레 FTA 비준안, 일단 정지!

농민 3000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저지' 국회 앞 시위 (12.29)/ 제주농민단체, "FTA 반대" 외치며 열린우리당 제주본부 점거(12.30)/ 국회 본회의 FTA 비준안 처리 유보(12.30)/ 농림부, FTA 비준안 통과되지 않을 시 6000 억원 가량의 농업지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학벌(29.3%), 남녀차별(21.2%) 등 뽑혀(12.31)/ 국가인권위, '구치소의 치료 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12월 16일 서울지법이 7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내렸다고 밝혀(1.2)/ 국가인권위, 2002년 10월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담당 경사에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수사외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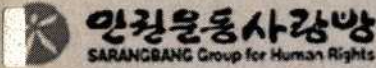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회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07일 (수)
제 24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2.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달 올려
3. 이해관계에 맞선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몰려진 과거사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숭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안들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때문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입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6일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별법), 친일반민족조사법,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등이다.

강제동원특별법 제정 추진위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규명법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법국민위)는 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 과거사 4대 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학살규명법국민위 익산유족회 이장근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익산역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에게 가한 폭격 때문에 부모를 모두 잃었다"며 발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1999년부터 미대사관을 비롯하여 다녀보지 않은 데가 없고, 학살규명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60여명을 면담도 해왔지만, 국회의원들의 밧줄 다름 때문에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라고 성토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인 김순덕(84세) 씨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에 생긴 고질적인 병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일 병원에 의탁하여 살고 있다"고 밝힌 뒤 "강제동원특별법이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도 못 이루며 기다려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씨는 술한 성노예 피해 여성들이 죽음까지 강요하는 역할을 이기지 못한 채 중국 등지에서 목을 매 죽어 갔다면서 "강제동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좀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살규명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83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학살규명법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발의되었고 국회 '과거사특위'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다산인권센터, 유가협 등 1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집시법의 개악에는 발빠르게 움직였던 법사위가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강력 규탄했다.

학살규명법과 강제동원특별법은 모두 진상규명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온전한 진상 규명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강제동원특별법 추진위·박은희 사무국장은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과거사를 진상규명하는 데 국무총리 산하 기구의 위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과 왜곡된 과거사의 회생양으로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법안의 제정이거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과거사 4대 법안이 안전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법국민위 이창수 학살규명법 정취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의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가 무사히 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처음으로>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닷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행진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6일 국회 앞에서 '2004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선포대회에 참여한 국민행동 소속 활동가 50여명과 전교조 회원 1000여명은 국회가 본회의에 계류중인 파병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부패와 치부로 국민의 고혈을 짜낸 것도 모자라 비리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집단적으로 부결시킨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파병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발언대에 올랐은 '나눔의집' 강일출 씨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끌려간 걸로 모자라 다시 청년을 이라크에 보내 죽이려고 하느냐"고 외쳤다.

국회 앞 노상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27일째를 맞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부의장도 "파병은 미국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이라크 민중들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파병의 부끄러운 역사는 5000여명이 죽고 6만여명이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충분하다"고 설파했다.

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의 종이에 소망을 적은 후 이를 노끈에 묶어 범민련 남측본부 농성장 주위에 걸어놓는 평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추가파병 동의안은 이 달 중순께 국회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에 발맞추어 국민행동 장대현 상황실장은 △실 연휴까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 달 말 대규모 집회를 열며 △2월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면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국현]

<기사 처음으로>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고스란히 개별 가족에게 전가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아왔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중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최하위 수준의 경제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상 유아 교육·보육의 단계 실시

하지만 두 법안이 다가오는 8일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전국 유치원·보육시설의 83%를 차지하는 관련 단체가 최근 합의를 교환하고 두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시설 폐쇄를 우려해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보육시설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보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한국보육교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는 원래의 개정안을 '보육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수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 것은 보육료의 인상을 부추겨 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이 특기적성교육 등 파행적인 교육으로 얼룩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반일제와 시간연장제를 도입한 것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이라는 보육사업의 본래 기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국회가 원안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만장일치 통과를 촉구하

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원안대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관련단체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락을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악이나 FTA 비준안 처리 등과 같은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법만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학부모시민연대 장재영 대표도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유아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법을 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입김으로 공공성 후퇴 우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및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일단 환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수정안과 유아교육법안의 내용들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라기보다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에 있어서 저렴한 양질의 교육의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법안들에서는 이러한 전제없이 민간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것만 언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립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려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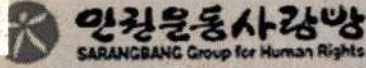
공공성과 아동 이익 제대로 반영 못해

이처럼 그 동안 이익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번번이 무산되어 온 상황에서 또다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국회가 시설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지금까지 고통받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08일 (목)

제 24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이 마침내 7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의 통과라는 절차가 아직 남겨져 있어 당장 8일 오후에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2월이나 열릴 다음 임시국회로 이들 법안들이 떠밀려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을 뿐, 심사소위 통과를 끝내 무산됐다.

이날 3대 법안의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소식을 전해들은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일단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남겨진 문제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제동원특별법 제정추진위 박은희 사무국장은 "일단 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과거 피해의 주된 당사자였던 가난한 기층민중들이 이 제 역사의 주인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관계부처들이 여전히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들었다"며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통합특별법 정책위원장은 "심사소위는 조사불응시 동행명령조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다는 수정 조건을 붙여 민간인학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애초 법안이 가진 부실한 조사권한을 더욱 약화시킨 것"이라 전했다.

비록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실마리는 풀렸지만, 본회의 통과와 조사권 강화 등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기사 처음으로>

강제 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집회 참가 도중 연행 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지난달 30일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 당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씨와 자말 씨는 도라 측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방글라데시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을 모아 집회를 열었고 △특히 비두 씨는 이주지부 투쟁국장으로 일하면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도 조직했으며 △연행 후에도 보호소 안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법을 어겼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들을 표적 추방한 진짜 이유가 노조활동 때문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비두 씨는 이주지부에 보낸 편지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4명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해 두 사람을 직접 현지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지부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두 사람을 추방하고 나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거짓증언을 하여 국제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히고, 7일 오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도 항의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80여 명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200여 명이 포위한 상태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 50여 명이 달려들어 방글라데시 출신 혁 씨와 내팔 출신 깨비 씨를 연행해 갔다. 이에 대해 사일 타파 지부장은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던 명동성당 농성단이 연이어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성당 밖 항의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Asian NGOs Consultation on Vienna+10)가 지난 12월 15-16일 이틀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되었던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그리고 아시아지역 준비회의에 앞서 1993년 3월 민간단체들이 모여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방콕NGO선언 등에 비추어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인권운동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반성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권·평화·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국제인권운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회의였다. 이 회의의 성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이다.

이번 방콕 회의에 모인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이들 회의에서 별도의 선언 및 행동계획들이 경쟁적으로 채택되면서 정작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모든 논의과정과 선언 및 행동계획의 문구 하나하나에 온갖 열정을 쏟아 부었던 민간단체들 역시 그 동안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방콕NGO선언의 내용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아시아 공동의 과제와 도전 재확인

참가자들은 또 주제별·지역별 부문토론과 전체회의를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현 인권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1993년 방콕NGO선언을 통해 아시아지역 공동의 인권과제로 확인되었던 내용들이어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인권과제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라고 불리는 인권의 특수성과 국가주권 등을 내세우며 인권의 보편성을 침식시키려 하는 아시아 각국의 태도가 지역 내 인권보장을 훼손하는 가장 크나큰 장애로 지적됐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로 인해 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역 내 연대활동의 연속성 부재

이번 방콕 회의는 1993년 당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나 아시아태평양인권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했던 주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아-태인권단체촉진팀(Asia Pacific Human Rights NGO Facilitating Team) 등과 같이 비엔나회의의 후속활동을 위해 조직되었던 아시아지역 연대체의 활동과 그 해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그 동안의 국제인권운동의 역사에서 한국 인권운동이 서있는 자리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과 방콕NGO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번 회의를 주최했던 포럼아시아(FORUM-ASIA)의 총차이 홈라트 사무총장의 폐회사처럼 이번 회의가 "지난 10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김기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09일 (금)
제 2489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2. '이주노동자 겨는 가스총' 비난 확산
3.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연 무상 교육·보육
4.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 「집회와 시위의 자유」
5.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저지함에 따라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물론 이는 농민들의 저항과 희생이라는 발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농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앞에서 FTA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나갔다. 오전 11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 과정에서는 1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농업 현실을 무시하는 FTA 비준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오후 1시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국농민연대는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런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시 "4월 총선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도 "올해는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제협상과 WTO/DDA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비준안 통과가 이후 농업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경찰은 수 차례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적인 진압으로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15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농민 62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박홍식 사무총장은 "시위용품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다"고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 다수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경찰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준안 처리가 다시 한 번 연기된 데 대해 전국민중연대는 성명서를 내어 "언제까지 농민들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모여 절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라고 되묻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아예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연대는 "WTO와 FTA를 통한 개방과 자유화는 대다수 노동자 농민을 희생시키는 '피와 눈물로 점철된 세계화'일 뿐"이라며 "정부는 개방 만능론을 버리고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향후 설을 기점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비준안 연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내달 9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겨는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

성투재단은 8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화성의국인보호소로 연행된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네팔 출신 J.K 푸리 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2명은 스크림을 짜고 연행에 저항하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1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한 방씩 발사했다. 이후 단속반원들은 가스총을 맞고 실신한 이주노동자 개비 씨와 허 씨를 연행해 갔다. 8일 이들을 면회한 명동성당 농성지원단은 "당사자들이 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를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연행상황을 목격한 이정호 신부(마석 살롬의 집 소장)도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 의해 발길질을 당하고 대로변에 내팽개쳐지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탄집회 참가자들은 가스총까지 등장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억압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석 살롬의 집 이영 신부는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 땅을 차라리 떠나고 싶다"며 "이 나라가 40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멸 파타 지부장은 "5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쫓겨나지 않고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하게 해 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동지들을 연행해 간다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번 '노예사냥' 광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계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부터는 대도시에서도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완화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모 바우처)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립교육기관으로 교육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이 어렵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앞서 7일 '유아교육 공교육체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은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수정안 제출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호규정'이 삭제되면, 유치원 급식비와 간식비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역시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수정안이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을 관련단체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8일 오후 4시 경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교조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려면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아동의 권리보다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해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킨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사 처음으로>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개악되기 전의 집시법조차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는 신고사항의 축소, 금지·제한 규정의 정비,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김승환 교수는 집회·시위가 집시법 이외의 법률을 통해 변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심검문을 위법적인 일체검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은 강제동행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현장에서 경찰폭력의 빈발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은 대항폭력이 가지고 있는 '상당성'을 고려하여 기소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자유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 때, 이 책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기사 처음으로>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약화 등 심의과정에서 후퇴된 조항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0일 (토)

제 24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2.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3.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4.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난 험난한 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국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다.

내년 말이 되면 육상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미국을 향한 모든 통로가 이렇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감시장치로 무장한다. 유럽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전에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탑승객들을 위협도에 따라 미리 심사, 분류하겠다는 목적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다. 다만 특정 사람들을 위협하다고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임은 분명하다.

미 정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고 얼굴-지문을 비롯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나 신체의 자유 따위는 거추장스런 것에 불과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주문'이 되어있다.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선 자유의 희생쯤 감수해야 하는가. 벌써부터 생체여권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한국정부로부터 흘러나온다. 자신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헌납하는 데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용감하게도, 지난 7일 미국 출장을 앞둔 한 회사원이 미국의 최근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참에 대테러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해외정보 교류에 대한 분명한 인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경찰국가의 극한을 향해 치달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과 관할 연기군 보건소를 방문해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지적됐던 △감금과 강제금식 등 이른바 정벌방 성격의 '보호관찰실'은 폐쇄됐고 △납자용 숙소보다 열악했던 여자용 숙소를 새 건물로 옮기는

등 일부 생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등 강제 수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 내 퇴소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가된 수용시설로 옮기고 기존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은 목살됐다. 또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함께 수용돼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했다. 공중전화와 우체통이 새로 설치돼 관리자 검열을 거치지 않게 됐지만, 식사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한 대뿐이어서 100여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랐다. 길게는 40일 동안 계속됐던 철야기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하루 3차례 예배는 그대로였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희선 간사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감금돼 있는 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실시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일부 손봤지만 핵심 문제는 여전

하지만 정부는 인권침해 상황을 서둘러 개선하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인권단체의 조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불법감금 및 폭력 △창문 쇠창살, 출입문의 외부 잠금 △각종 질환 발생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단 △특정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를 예시하며 집중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조치사항으로 △입소생활자를 개별 면담해 침해사례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설을 옮겨 전문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사와의뢰와 '조건부 신고시설' 철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연기군보건소 권오석 소장은 이날 대책위의의 면담 자리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제정이 부족한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선 간사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시설 생활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직접 보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지침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시설폐쇄 이후에 수용자들은 어떻게 할지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말 '조건부 신고시설'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직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씨의 사건을 담당하던 이민석 변호사는 "군의 담당 검찰조차 천 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조작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까지 아주대 조직사건 관련 연행자는 천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12월 3일 1차로 연행된 8명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6명은 12월말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2차로 연행된 군복무자 3명 중 천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기도 헌병대에 각각 수감돼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수원지검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아주대 재·졸업생 6명에 대한 최종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한데다 검찰이 여름농활자료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한총련 출범식 참가 사실도 문제삼는 등 공소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주대 비상대책위 김보은 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조직사건을 터뜨려 놓고는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자 정당한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직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한편 학생운동을 압살하려는 빌미일 뿐"이라 비난했다.

이들 6명의 1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기사 처음으로>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은폐되고 뒤물린 현대사 위에 어떤 자들의 죽음은 흔적 없는 기억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미 깊숙한 무덤 안쪽으로 사그라진 듯한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지금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은 건재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온전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미흡한 의문사특별법에 기초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을 살피면서, 죽은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시시각각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오늘날의 초상을 각인시킨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2000년 10월, 의문사위는 유가족들이 감행한 422일 간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로 세워졌지만, 지극히 미비한 조사권한과 제한된 조사 기간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입김이 개입된 산물이었다. 유가족 소속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그린 <민들레>를 제작한 바 있던 '빨간 눈사람'(www.redsnowman.com)은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하여, 규명되지 못한 과거사를 짊어진 오늘날과 다시 한번 호흡한다.

'죽은 자들의 동지'였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뿔뿔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베풀어야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명을 위한 험난한 길을 떠난다. 작품은 때론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질타를 받아야 하고 죽은 자들의 무덤 앞에서 진상 규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간 조사관들의 씩씩한 무게감을 담백하게 담아낸다.

의문사 인정 19건, 기각 33건, 진상규명 불능 30건.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수치를 남긴 채,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1차 활동을 마감한다. 카메라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의문사위의 텅빈 공간을 응시하면서,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 기간 연장을 부르짖으며 다시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과 함께 선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영화는 조용히 묻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2기 의문사위가 뾰족한 권한 확대 없이 조사 기간만 연장된 채로 설립, 활동 중이다. 그나마 올 6월 활동시한이 마감될 예정이어서 유가족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3일 (화)
제 24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2. 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3.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안과 개선안을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뒤에 비로소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된 것.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시춘 상임위원은 "사회보호법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데다가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감호 대상자 대다수가 단순 생계범임이 밝혀졌고,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피감호자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동의했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보호법 내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안으로 담아내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13명을 비롯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실 앞에 모여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을 요구하는 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를 국회에 즉각 권고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전원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난 12월 29일 청송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이상본 씨는 "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 박찬은 집행위원장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임시 국회 회기 내에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 권고안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에 대한 대안 없이는 사회보호법의 완전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이후 치료감호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공대위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주 내로 각 당 법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면담할 계획이며, 설 이후에는 각 계 원로와 명망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저항의 세계화' 방안 모색...국내 300명 이상 참가

4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다. 국내 참가자들도 12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팀이 인도로 출국한 데 이어 13일 '자유 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출국하는 등 인도로 속속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강대국들과 초국적 자본가들이 모여 만든 '세계경제포럼'의 대항회의로서,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를 시작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장을 되어왔다.

이번 4회 포럼에는 전세계적으로 10만여 명의 인원이 참가해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를 핵심 의제로 하여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서로의 경험과 의견들을 나누게 된다. 세계사회포럼의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논의도 예정돼 있다. 게다가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브라질이 아닌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어 전지구적 반신자유주의·반군사주의 투쟁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포럼에 참가한다.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등 국내 참가자들은 △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미 군사주의와 한반도 평화 △보건의료 △정보인권 등 다양한 의제의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하는 한편,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한·일 민중공동행동'도 기획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일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국제연대운동의 가능성으로서 이후 포럼의 성과가 주목된다. 인권단체들은 18일 FIAN이 주최하는 '식량권과 인권' 포럼에 참가해 북한 식량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전세계 민중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면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요즘, 4회 세계사회포럼이 국내외 운동 진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 기대된다.

<기사 처음으로>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많은 이들의 새해 소망 중에 무엇보다 '건강하기'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개인에게도 고통의 시작이지만 집안 거덜나는 지름길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더 큰 새해 소망이 있을까 싶다. 게다가 가벼운 감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까지 아픈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은 결코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TV를 봐도 아픈 사람들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매주 각 방송사마다 한두 개씩은 방송된다. 방송에는 저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애 밀어닥친 병마, 난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이 정말이지 가슴 아프게 그려진다. 강심장인 사람도 ARS견뢰 한 통 걸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연들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 뒤에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껴본 적은 없는가? 나는 지난 2000년 의사파업 이후 이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 한 푼 두 푼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분노를 느낀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만 등쳐먹는 이런 국가 사기에 놀아나야 하는가 하고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이치가 어찌해서 이 지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지간한 증산충도 허리를 휘~청하게 만드는 재수 없는 중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새해 소망으로 비는 일, 이것만이 우리의 최선인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역할만큼 의료부문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마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민중의료연합이 발간한 책 <이윤보다 생명이다>에 소개된 영국의 의료 체험기는 이러한 분노를 한 단계 상승시켜 자괴감마저 들게끔 한다. 영국의 의료체계라고 해서 비판의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원부터 퇴원 그리고 이후 치료까지 환자 중심인 의료보장체계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의료체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러운 것이다. 한국의 병원만을 경험한 나로서는 영국의 의료체계가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정도의 건강보험마저 '사회주의 건강보험' 운운하며 바뀌어야 한다고 나선 의사단체들이 2월에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의사파업 당시, '공분(公憤)해 마지않았던 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이 참에 아이러니한 희망을 가져본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이런 평생을 뒤바꿀 만한 우리들의 분노가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병에 걸리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더 이상 온 없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근예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12일)

1. 다시 시작된 '인간 사냥'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 임금체불 등 사유 있으면 네 차례에 한 해 사업장 이동 허용...임금인상 목적은 금지(1.5)/ 정부 "16일부터 제조업체 중심으로 합동단속 강화"(1.7)/ 비두·자말 씨 강제추방 관련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에 서 명동성당 농성단 이주노동자 2명 연행...단속반, 가스총까지 사용(1.7)/ 농성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 법무부 규탄 집회' 열어(1.8)/ 이주노동자 3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갑 채워 강제연행돼 파잉표적단속에 항의 빗발(1.9)

2. 다음 임시국회, 에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은 통과 보류(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 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죽~!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6)/ 바그다드 서쪽 미군 보급기지 박격포 공격...미군 35명 부상(1.7)/ <에이피통신>, 이라크 주둔 미군 '재군무시 1만달러 보너스'에 냉소(1.7)/ 미군 블랙호크 헬기 미사일 공격받아 탑승자 9명 전원 사망(1.8)/ 파병 예정지 키르쿠크주 하위자의 무장세력 지도자 아부 카이스(가명), 한 국군 추가파병에 경고 "미군과 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저항에 나설 것"(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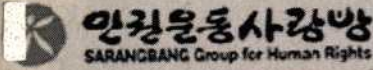
4. 주목할 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수배동생 만났다고 국방부 2개월 정직 당한 민력당 수배자 이석기 씨 누나 정직 취소..."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해당되나 직무와 상관 없고 친동생인 점 고려할 때 정직 지나쳐"(1.8)/ 의정부지원, 미군 훈련장 진입 시위 대학생 호송 차량 가로막고 석방요구 농성 벌인 혐의로 김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어"(1.8)/ 인천지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1.9)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4일 (수)

제 24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동성애자가 에이즈 전염 집단?
2.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3.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현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동성애자가 에이즈 전염 집단?

<한겨레> 편견보도에 동성애자인권단체들 비난 빚발

<한겨레>가 동성애자를 에이즈 전염 위험 집단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실어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8일자 <한겨레>에 사회부 안종주 기자가 "여성동성애 에이즈 감염 첫 확인", "남성동성애자 28% 헌혈 경험"을 제목으로 쓴 두 건이다. 안 기사는 한 국제에이즈퇴치연맹과 남서울대 이주열(보건행정학) 교수팀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고위험군 성행태 및 에이즈 의식조사"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동성애자의 28.3%는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최근 3년 동안 에이즈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비율이 51.4%"라고 쓰는 등 동성애자를 에이즈 전염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 안 기사는 에이즈 감염인 258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성 감염인 2명이 동성애 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특히 여성 감염인 3명은 딸은 여성과 자주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혀 여성동성애 관계를 통한 에이즈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고 썼다.

동성애자=에이즈 전염 위험 집단?

이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엠네스티 성적소수자 그룹 등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기사 내용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8일 낸 성명서에서 "기사는 동성애자가 '고위험군'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HIV의 감염확률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액에 노출되기 쉬운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이지 위험집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는 체액과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되므로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만이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국립보건원도 해명자료를 내 기사는 "여성 감염인 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동성'으로 응답한 여성 2명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답변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립보건원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권관우 사무총장도 해명서를 통해 <한겨레>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판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추후 신문사와 안 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적 답변이 과학적 근거로 둔갑

이에 대해 안 기사는 "가장 중요한 인권인 건강권을 위해서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 안전한 성행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에이즈 감염인 중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재운 부대표는 "정확한 통계도 없고, 국립보건원의 감염경로 조사도 해당자에게 '어떻게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동성애자를 에이즈 전염위험이 높은 위험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인련도 "스스로 보건복지전문기자라고 밝혔다면,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인들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 우선 보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조장 안돼

한편, 애초 비공개를 전제로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연구팀의 보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 기자가 기사를 낸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자문위원인 안 기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조사를 담당한 이주열 교수는 "회의 막바지에 안 기자가 언론보도를 권했지만 언론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보도 후 안 기자에게 항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언론보도를 반대할 것 같아서였다'는 해명과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인련 정을 대표는 "조사 결과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 때문에 비공개를 전제로 했는데 기자가 특종에 현혹돼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안 기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설문조사가 시행됐다는 것은 몰랐다"라면서도 "사실보도 기사이므로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측도 아직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문을 받지 않아 답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 처음으로>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법정에서 의롭지만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가 12일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제감온도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고 1인 시위에 나선 정 씨는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안고 살아온 남편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낡은 유물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1974년 건립된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멤버였으며 이후 각종 반유신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정 씨는 "한평생 조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국에 슬픔과 함께 때때로 분노를 느낀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 씨는 국가보안법에 이어 송 교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보여준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씨는 "송 교수가 전식,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받은 종양제거수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구치소 측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달 넘게 무시하여 결국 독일 대사관을 찾아가갈 수밖에 없었다"며 "영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고 나서야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간신히 찾아가간 경기도 안양병원에서도 단지 내 시경 검사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정 씨는 또 병원측이 환자로 찾아온 송 교수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했으며 분노를 표했다. 게다가 담당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마취주사를 놓아 이후 송 교수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담당 의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정 씨는 "검찰이 송 교수로부터 '전향'을 받아내기 위해 포승으로 묶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호송차를 먼저 구치소로 돌려보낸 뒤 3시간 가량 차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수법을 통해 송 교수가 저녁식사 시간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며 배까지 고프게 만드는 검찰의 치졸한 수법을 꼬집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대해 정 씨는 "법정 내에서 차차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공판이) 정치적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라며 억지수사를 계속하는 공안검찰을 비판했다.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송 교수의 6차 공판이 지난 5차 공판에서의 오길남 씨 진술에 이어 또 다시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 씨는 비판했다. 이날 공판

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황장엽 씨가 출석하게 된다.

하지만 정 씨는 "이같은 현실은 아직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견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연행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가스총 발사. 실신한 이주노동자 두 명 연행. 연행 과정 중 구타 가능성 제기.

#2. 친구를 모함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입안을 빨래비누를 묻힌 수세미로 닦음. 밤에 잠 안 재우고 동물처럼 손 잡고 계단 오르게 함. 옷을 때까지 때리고 100분 동안 2000번 절까지 하게 함.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일면이다. 언뜻 보면 별 연관성이 없는 듯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영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A씨의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아동을 학대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 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원에서 처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교육적 처벌'로 둔갑시키고 '폭력의 정도'만을 문제삼음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있다. 언제까지 상대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체벌/폭력'을 어른들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것인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재판부는 결국 전국의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하고 오히려 부추길 소지까지 낳게 되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면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에 거듭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약자에 대한 폭력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가 '망각'과 '용인'을 통해서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5일 (목)
제 24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2.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3.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빚음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사한 장준하 씨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금씩 진실에 다가서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있다.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장준하 씨 의문사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의 열쇠를 제공할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시대 광복군 활동에 이어 해방 후 『사상계』를 통해 언론민주화 운동과 유신독재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장준하 씨는 1975년 8월 17일 등산 도중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건 발생 하루만에 실종사로 처리됐다. 그 동안 장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술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후두부 부위에 함몰골절상, 오른쪽 팔과 둔부 부위에 주사 자국이 발견된 점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사체의 의복에 미끄러져거나 급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사체 주변에 있던 안경이나 보온병에 급한 흔적조차 없는 점 △당시 장 씨와 동행했던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 씨가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유급 정보원(P/A)"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온 의문사위는 "사고 발생 당시 장 씨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전한 의문의 주인공이 바로 김용환 씨"라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하지만 당시 사고현장 주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없었고, 사고 발생 직후 사라졌던 김 씨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또 사고 당일 작성된 중정 문서에는 전화를 건 주인공이 "김용환(동대문구 이문동 거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정이 어떻게 김 씨가 전화한 사실을 알았으며 거주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도 중정의 사고 개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김 씨와 중정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작성된 한 장(!)의 '중요 상황보고서' 이외에는 다른 문서가 없다며 지금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75년 3월 31일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 씨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해 왔던 중정이 유독 사건 당일에만 한 장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의문사위는 "당시 중정의 추가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장 씨 사망 발생 이튿날 당시 진중채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독대 면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두 명의 군인과 장 씨가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사고 인근지역에 보안부대가 존재했으며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인근 부대가 출동해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기무사령부에 관련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무사로부터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이다.

이제 죽음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꿈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청와대로 직접 가져 오라 해서 내가 직접 전해주겠다"고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려는 의문사위 앞에 놓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을 '노예'로 몰아맨 채 이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 성 착취산업의 고리를 끊고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로 촉발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으로 '성매매알선동행위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아래 처벌법안)이 여야의원 86명의 공동 발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 처벌법안은 업주와 중간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을 통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명목을 불문하고 일체의 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통한 이윤 동기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사위 주위의 공청회까지 개최되면서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으나, 법사위는 지극껏 의결을 미루고 있다.

처벌법안과 동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회 여성위원회에 제출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는 다행히 지난 12월 29일 가결돼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호법안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과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을 국가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들의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이 매우 저급할 뿐 아니라,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말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법 제정 추진의 주요 동력마저 사라진 상태여서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지극껏 여성위에서 보호법안의 심의가 끝난 뒤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법안의 심의를 미루어왔지만, 이제는 그 명분도 사라졌다"며 두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애초 제출된 원안의 내용이 후퇴하고 있어 법안의 시급한 통과만을 촉구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처벌법안은 원안에서부터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행위자'와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된 자'를 구별하고 후자만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자칫 '성매매 피해여성'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다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삽입되면서 여성에 대한 처벌을 도리어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성매매를 필요악이라 보고 '자발적인 꽃병도 많다'라는 의원들의 저급한 인식수준이 반영된 결과"라며 법사위를 비판하면서도 미진한 법안이나마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여성주의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성매매된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죄를 묻게 되면 자연히 알선업자의 죄를 제대로 묻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지만, 노예상인이 아니라 노예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통과 자체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인식에 기반해 법사위가 올바른 성매매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연행"에 대해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인권 후퇴와 함께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인권단체들은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일 전국이주노동지원단체연대(준), 일하는예수회 등 전국 각지의 단체들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정부의 파잉 단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12일에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결성한 'Observatory'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저항을 이끌어온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파괴하고 그 지도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한국정부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이주지부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199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옹호자 선언'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폭력단속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6일 (금)

제 24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p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2.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3. <특집> 거울장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4. 클락! 인권정보자료 - 이중의 역할을 이겨내는 법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15일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22명이 결성한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아래 주민투표관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4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찬반 득표수가 같거나 투표율이 1/3 미만이면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투표권을 공고일인 1월 25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찬반운동은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20일간 진행하며 △부제자투표도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전에는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TV토론회와 읍면별 토론회 등도 열린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안대책위 측이 '정부가 무려 한달간이나 비공식 대화를 지연시키면서 주민투표 일정과 시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 장관의 사퇴와 사과로 여론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부안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각계에 올 2월 주민투표 관리를 제안함에 따라 구성됐다. 부안대책위 측이 독자 투표를 선택한 것은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반대 분위기가 수그러들기를 노리고 있는 정부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을 준용해서 실시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투표 결과 주민 다수가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 분위기는 찬성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는 정부의 투표일정 연기 명분도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희수 대외협력실장은 "민중의 희망을 저버리면 어떤 체제도 정권도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통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이번 투표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핵폐기장 찬성단체인 '(법)부안군 대책사업 유치추진 연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주민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민투표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향후 투표 성사와 결과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행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행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1심에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방용석 노동부장관 규탄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노동사무소 직원이 가슴을 밀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과 4주의 정신진단을 받았다.

서 씨와 전북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보고 노동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그 이튿날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데 반해 노동사무소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받아들여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서 씨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되레 실형을 선고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재판부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무고죄를 인정하면 가해 남성들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에 분노한다"며 검사와 판사의 미흡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도 공동성명을 통해 "공권력이 한번은 성추행을, 또 한번은 사법폭력을 행사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특정한 법률의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단식농성을 전개했던 청소년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6대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이 오는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되는가도 관건이다.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총 3가지.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폐지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12월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폐지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폐지법안도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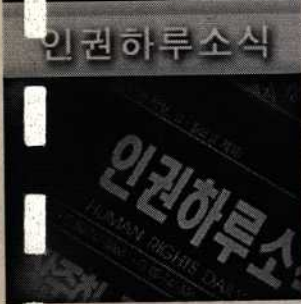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들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호관찰처분과 수감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상섭 의원안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용규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구금 위주의 치료감호를 치료와 보호 위주의 치료보호' 제도로 전환하는 '치료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주영 의원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보호법이 원래 있어서 안되는 법이었던 만큼 잔재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서도 최용규 의원이 제출한 치료보호법안을 보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대체적 의견이다.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17일 (토)
제 24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2.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3.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4. <안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기빈 씨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례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서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쥐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광풍에 맞서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맞잡았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그 이름도 빛나는 산업연수생으로, 관광비자로 이 땅에 들어와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설 새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

며칠 전 노동부는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8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인력을 형성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추방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이주노동자를 국경 밖으로 내모는 데는 분명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 노예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노조를 조직해 온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추방하고, 그들에게 가스총까지 들이대는 것을 보면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난다.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그저 노예처럼 일하다 허가받은 시간이 지나면 돈 때이고 꼴병 들어도 소 리스문 없이 사라져 줄 순종적인 노동력! 그것이 정녕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의 희망이 단속추방의 공포 없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 한 소리였던가. '전면 합법화'만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의 거처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16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이 공식 출범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독립적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소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모임의 출범을 공식 천명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보호감호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감호자들이 죽어나갔고 수많은 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목숨을 걸고 몸으로 절규한 것이 벌써 23년"이라며 오랜 기간 존속해 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세 개나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폐지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법사위를 규탄했다.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청송감호소 내에서 2002년 4월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폐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오랜 기간 영어의 생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출소자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담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와 매일 보내기, 법사위 위원 소속 지구당 방문, 사회보호법 폐지 지연에 대한 항의농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6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당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이 강 장관에게 "사회보호법 존치론의 근거가 박약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자,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해왔고 (국가인권위 권고) 정식 접수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보호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26일, 여섯 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황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조작된 각종 사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몇몇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김원웅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각각 제출한 시효배제 촉구 건의안과 특별법제정 청원도 계류중이나 심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 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법무부는 로마규정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16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까지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초안은 ICC 관할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관할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조작·은폐 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시효 정지 등의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이행입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효배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으래요"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가빈(17). 지난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든 가빈 씨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이 앞섰다고 한다. "그런데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통지서의 글을 보고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날인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나빠졌어요." 가빈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지문날인제도와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는 걸 배웠던 게 생각나 인터넷을 검색해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가빈 씨는 용기 있는 글을 남겼다.

무려 37년간 계속되어 온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반인권성이 수 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생애 최초로 지문날인을 하게 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가운데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나선 주체는 여지껏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빈 씨의 헌법소원은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있어서 도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가빈 씨가 지문날인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나쁜 제도가 있으면 바뀌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지 입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에서의 자세로서 배운 거니까 그런 걸 실천하는 자세로 세상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빈 씨는 앞으로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가빈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친구들도 헌법소원 잘 해서 지문날인 안 하게 해달라며 지지해줘요."

가빈 씨는 미국의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지문날인 실시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빠요. 정부가 미국정부에 항의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빈 씨는 "헌법소원 잘 돼서 법이 고쳐지고 친구들도 모두 다 지문날인 안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가빈 씨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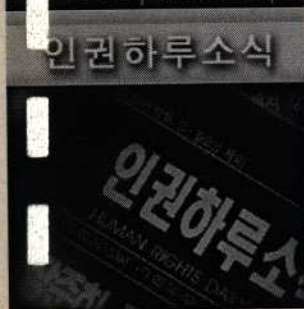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20일 (화)

제 24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2.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3.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5.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뭉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관계자들의 면담이 있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정부측은 △4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일시 귀국하면 고용허가제로 우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5~7개로 예상되는 '고용허가 이행보장각서'(MOU) 체결 대상국 출신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재입국 과정을 추후 논의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출국 유예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자리에서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할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이민회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 9일 안산의국인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재입국 대상국을 일부 국가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자진출국 유예기간에도 여전히 '인간사냥'도 중단돼야 한다. 한편으로 비마인족민주동맹(NLD) 당원처럼 귀국할 경우 처벌이 우려되는 경우는 절대 추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명동성당 농성단 측이 18일 농성자 총회를 통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샤멀 타파 이주지부장은 "우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싸워왔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여기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하지만 농성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 제안의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재입국 후 고용허가제와 싸우는 투쟁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19일 오후 명동성당 농성단 이주노동자 60여 명은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일어난 '가스충 단속'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9일자 참조>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위가 있는데 왜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사 처음으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해 총학생회장 맴모 씨도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주대오'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학교로 돌아가던 도중 연행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연행자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김상규 아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가 연행을 강력 규탄하면서 "지난 12월 연행자들이 대부분 졸업생이었던 데 반해 최근까지 학생회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추가 연행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현 학생회 활동가들까지 '자주대오'와 관련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대오란 실체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지목한 모임들은 NL계열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 및 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진환 변호사는 "검찰이 하재용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어에 구애받지 말라, 다른 이들은 모두 사실을 불었다, 너 혼자 입다물고 있으면 불리해진다'는 등의 협박을 동원하여 억지로 필요한 대답을 이끌어냈다"며 검찰의 강압적이고 케어맞추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예초 이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대홍 담당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달 3일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기사 처음으로>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설에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면, 그 다음엔 관객들이 한 명씩 배역을 맡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차별 사례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명절 풍경'이다.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딸, 마루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관객들은 손을 들고 무대에 나가 배우를 대신해 연기를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바꿔보려 했다. 어머니 혹은 딸의 역할을 맡은 관객들은 '여성들간의 공조' 체제를 꾸미기도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남동생을 설득하거나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왜 제사상을 여자들이 차리는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음식 못 하겠으면 설거지라도 해라, 하다 못해 상이라도 퍼라, 왜 아버지의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내는가, 상은 여자가 차리고 제사는 남자만 지내는가, 딸은 자식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의식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관객들이 노력을 해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았다. 다른 배우들은 "그게 순리다"라는 말로, "전통을 무시하겠다는 거냐"는 말로, 혹은 "버릇없이 굴지 마라"는 호통이나 무응답으로 '그녀'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해 온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렇게 단순한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다니. 성별 역할분리란 것이, 부계혈통주의란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강고한가를 아마 모든 관객들이 뼈 속 깊이 느꼈을 것이다.

그 때, 한 남성관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자기가 아들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무대에 올라간 관객은 아버지에게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 같다고 주장했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며, 누나에게 함께 부모님을 설득해보자고 권했다. 그러자 불과 몇 분만에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역할극을 준비한 사람들에게거나 관객들에게나 충격적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해보지 못한 상황을, 한 남성이 그리 어렵지 않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 우리는 무력감과 허탈감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명절이 여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 국민을 성차별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명절문화가 여성들의 아우성과 노력만으로는 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설날,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할 인권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조이여를 닮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13)/ 청송보호 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 공식 출범...청송에선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6차 단식농성 돌입 체비(1.16)

2. 계속되는 저항, 꺾이지 않는 파병 고집

이라크 침략 뒤 현지에서 숨진 미군 500명 육박(1.11)/ <윌스트리트저널>, 테러분자로 몰려 지난해 8월 미군에 연행된 뒤 고문당하며 구금돼 있다 최근 풀려난 이라크 상인 사연 소개...함께 끌려간 아들은 아직도 못 풀려나(1.12)/ 한국군 군수조사단 머물던 이라크 키르쿠크 주둔 미군캠프에 미사일 공격(1.14)/ 바그다드 미군사령부 겨냥한 자살 차량폭탄 공격으로 20명 숨지고 수십 명 부상(1.18)

3. Pride of Asia?

국제인권단체 Observatory, 비두·자말 강제출국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돌입(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12)/ 청와대 경호실, 4년제 대졸 이상·현역 복무자 등 경호원 자격 제한규정 없애(1.13)/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중간 조사결과 발표하고 국정원에 '문서고 열라' 요구(1.14)/ 서울지법, 술에 취해 가족들 위협한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기사 처음으로>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뭍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지난 16일부터 인도 뭍바이 네스코 그라운드에서 시작된 4회 세계사회포럼이 오늘로 5일째 일정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 땅값이 오르면서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방치됐던 이 공장지대는 세계적인 행사장이 되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장 건물에 수십 개의 회의장과 전시장을 설치했고, 주변 공터에도 칸막이를 이용해 수백 개의 소규모 회의장과 이벤트 장소를 만들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32개의 나라들에서 2천 6백여 개의 단체, 8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1천 개가 넘는 회의와 세미나, 워크숍과 2백여 개의 행사를 준비했다.

뭍바이 산업경제의 상징이었던 이 옛 공장지대에는 농민과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 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이 매일 반전, 반신자유주의, 인종차별반대 등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로 인도를 비롯한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단은 격렬한 춤과 울동, 강렬한 타악기 연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행사장에는 먼지가 뿌옇게

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벤트로 시끌벅적하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 문화와 각종 이슈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닌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총집결된 것이다.

다양한 의제, 수많은 토론들

이번 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 차례 열렸던 이전의 포럼처럼 '반신자유주의'와 '반전'으로, 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전략,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의제로는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세계화, 경제와 사회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토지, 물과 식량 주권 △종교, 윤리, 언어적 배제와 억압 △배제, 차별과 억압: 인종주의와 카스트제도 △가부장제와 성 △노동자와 노동의 세계 △미디어, 문화와 지식 등이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정당과 사회운동 △세계화와 그 대안 △세계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와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로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투쟁 외친다는 비판도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은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에는 소홀하다. 대회 상층부는 말로만 반신자유주의, 반전 투쟁을 외친다"고 비판한다. 실제 인도 공산당의 20개 분파들은 다른 장소에서 세계사회포럼을 비판하는 '뭄바이 레지스탕스 2004'(Mumbai Resistance 2004)를 별도로 조직했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을 비판하면서도 포럼이 사실상 다양한 세계운동을 연결해주고 논의를 촉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은 별도로 반신자유주의·반전 투쟁, 세계사회포럼의 전망 수립과 관련한 활동과 총회를 매일 열고 있고, 논의의 결과를 세계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문에는 주로 올해의 '반전 공동행동의 날', 홍콩 WTO 각료회의의 투쟁에 대한 세계운동세력의 관심과 투쟁역량 총집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전세계운동의 연대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 요구

16일 열린 개막식은 아프리카 무용단의 격렬한 리듬 무용, 파키스탄 그룹의 노래로 막을 열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다른 세계들) 함께 건설하자"는 구호가 대회장 전광판을 장식했다. "반전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세계적 차원에서 결합하자", "뭄바이에서부터 그 행동을 조직하자"는 발언도 쏟아져 나왔다. 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각국 참가단과 인도 참가단들은 개막식 내내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나갔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대회 조직위가 장애인들의 접근권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아예 없고, 행사장에도 편의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며, 개막식에조차 수화통역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조직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회 조직위는 다음 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한국참가단의 활발한 활동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을 비롯해 350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 참가단은 △칸쿤투쟁 이후 WTO 협상전략 △아시아지역 투자자유협정 반대 투쟁 조직 △사유화 반대투쟁에 대한 각국의 경험 공유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 연대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폐막식에서는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아시아지역의 공동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반전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시 낙선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 각국 참가단과 발빠르게 접촉하고 있고, 18일에는 일본 참가단과 함께 공동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 참가단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서명을 받는 일이다.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참가자들은 앞다퉈 서명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사회권 분야 논의 활발

이번 포럼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자유권에 매달려 왔던 국제인권단체들이 사회권 분야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행사가 인도에서 열린다는 점이 반영되어 인종주의, 노예제 문제 등 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 많다는 점, 이전 국제회의장에서 중심 의제로 다루어지던 버마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티벳 문제를 다루는 토론과 시위, 부스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 등도 눈에 띈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인권 토론은 다음 호에 소개한다.

[인도 뭄바이=박래균, 이진영]

<기사 처음으로>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21일 (수)
제 24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2.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3. <특집> 겨울장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대회 조직위 차원에서 공식 주최한 행사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전세계적인 사회적 불안정성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의 사회권과 발전권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자유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온 12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19일 개최한 '사회 변화를 위한 인권' 패널 토론은 이런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4백 명 가량이 참가한 이 회의의 사회를 맡은 앰네스티 이레네 칸(Irene Khan) 의장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심화 문제는 인권운동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덜란드의 바스(Bass De Gaay Fortman) 씨는 "빈곤 그 자체가 인권탄압이다.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 개발 등의 문제에서도 참석자들은 인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민영화 문제를 주요 인권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토지, 물, 식량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만큼, 이를 쟁취하기 위한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권 확보 연대조직인 피안(FIAN International)과 앰네스티가 18일 함께 개최한 '인도와 북한에서의 식량권' 세미나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식량권 문제를 발제한 앰네스티의 라지브(Rajiv Narayan) 씨는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 문제를 안고 있다. 앰네스티는 식량 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단체들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20일 북한 식량문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피안의 한 관계자는 인도 14개 주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식량 확보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 이들은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수자들의 인권, 여성·아동의 인권, 무기거래 반대 등의 논의들도 이뤄졌다. 이들 논의는 영역과 주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제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목격하고 있는 세계 인권운동 진영이 사회권과 발전권을 중심으로 인권의 논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인권운동의 방향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이 향후 국제인권운동의 질서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만하다. [뭄바이=박래균]

<기사 처음으로>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1/4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만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우산을 쓸 수도 없으며 절에 들어가서도 안되며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트들의 추앙을 받는 암베드커(B. R. Ambedker)는 인도의 독립 헌법에서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들은 교육, 고용, 사회생활 모두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제노동 등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불교로 개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계, 경제계에 진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달리트들은 "카스트 제도 철폐"를 외치는 시위를 연일 열고 있다. 이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를 넘어 이제는 말하겠다는 의미로 입을 크게 그려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인다. 달리트 해방운동 지도자 마틴 맥완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19일 조직위가 주최한 인종주의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네팔, 나이지리아, 일본, 볼리비아 등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인종주의가 남아 있는 나라들의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선적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등의 심각한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종주의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대중에 대한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부락 해방동맹의 타가와 마스터 씨는 "인종차별을 받는 우리는 각 나라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국제연대를 하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수많은 회의와 행사들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제도만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나 현대에서 사실상 노예와 다를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와 연결하여 인종주의를 인식해야 연대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과거부터 존재해온 제도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모인 세계 사회운동단체들이 인종주의를 주요한 의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몸바이=박래균]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잡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곤투기 전략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기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다고 최육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타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1시간에 1.5명꼴(경찰청 통계)로 추산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유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진 죽음의 긴 행렬은 기초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16대 국회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기초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의 기초법 개정 청원과 김명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자, 보건복지위는 이 안들을 통합해 기초법 개정 대안을 만든 뒤 12월 17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초법의 문제점을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히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 안의 자구체계 심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직접 수정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오히려 좁혀버렸다.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추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것.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1년 뒤인 '2005년 7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과도하게 넓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가족이 분리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김다혜 간사는 "보건복지위 개정안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최소한 부양의무자 범위라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졌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며 안타까워하면서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시행시기가 교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국회 법사위에서 기초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악되고 있는 사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빈곤층의 현실을 또 한번 외면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 윤수정 사무국장은 "재산율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환산율이 여전히 높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서 사람들이 탈락하거나 생계비가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도 겨우 3.5% 정도 인상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국장은 또 "정부는 수급권자 수를 140만에서 150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빈곤계층을 500만에서 800만까지로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예산을 낮게 책정하고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빈곤층의 수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수급권자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며 꼬집었다.

기초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대폭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빈곤문제의 해소는 요원한 셈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27일 (화)
제 24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2.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3.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4.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사무실에서는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영민 씨를 위한 축하의 식탁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영민 씨의 친구와 그가 활동하고 있는 노동문화방송 'Joy살.net' 동료들, 병역거부자, 인권활동가 등이 함께 해 그의 병역거부 결정을 지지해 줬다.

영민 씨는 이 자리에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침묵하며 살아간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없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와 군사를 늘려 온 결과 일시적으로 평화는 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두려움과 폭력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로 지금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평화는 군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군대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계속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영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는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삶에서 체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5년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 청년 후원자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던 도중,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미 2002년 6월에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유호근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 밝히고 "정신적 풍요와 행복을 위해 양심을 지키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병역거부자로서 힘든 점이 있더라도 병역거부를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민 씨를 응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서울지법은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이모(25)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향한 길이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 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수감 중이며 박경석, 박경희 활동가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철준 변호사는 "시위방식이 다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해석할 수 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도현 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내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하겠지만, 이러한 투쟁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희 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후회는 없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 처음으로>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딧불'은 영화제라는 행사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매 달 1-2차례씩 열렸다. 주로 그 해 상영작 중 관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다시 보고 싶은' 인권 영화 중심의 상영회였다.

'반딧불'의 변화 방향은 먼저 '인권 현안'에 바짝 다가서는 것이다.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현안들을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함께 공감하며 활동의 방안 들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 올해 첫 상영에서는 최근 전쟁 명분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대테러 조치'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고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 이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테 러방지법인 '애국가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 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은 홍수 만난 독처럼 언 제 터져 버릴지 모를 상황이다.

상영작은 9.11 이후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인종탄압의 실상을 밝히고 있 는 <망각을 경계하라 Lest we forget>이다. 이번 '반딧불'을 통해 국내 처음 소개되는 이 작품은 미국 정부가 전쟁과 테러를 명분 삼아 인권을 짓밟아 온 사례가 비단 9.11 뿐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2차대전 때 진주만을 폭격 당한 미국은 곧바로 미국 거 주 일본인들에게 보복조치를 행한다. 작품은 미국 역사가 자랑삼아 온 '시민적 권리'가 야만의 저편으로 내던져진 내막을 들려준다.

두 번째 변화의 방향은 '움직이는 반딧불'이다. 상영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형식뿐 아니라 '인권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반딧불'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반딧불'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등 특정한 관객을 초청해서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

한편, 이번 상영부터 '반딧불'이 처음 불을 밝혔던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영상미디어센 터로 자리를 옮긴다. 극장주인 흥국생명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반딧 불'과 같이 '의미는 있지만 돈이 안 되는 행사'의 일정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밀려나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인권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해 극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진실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반딧불'은 지금 인권운동의 현장을 밝게 비추는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변화의 결정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때 : 1월 31일(토) 오후 3시
 △곳 :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http://www.mediact.org/center/map.htm>)
 △문의 :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현지 사무소 개설하고 투표일 2월 14일로 공고(1.25)/ 김종규 부안군수 "주민투표법 발효 전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적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우 외부의료인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1.19)/ 국가인권위, "부산교도소 수감자 배모 씨 자살원인은 4개월 연속장벌과 관리감독 소홀"...손해배상 받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1.20)/ 서울지법, "국가는 시위현장에서 강제연행된 취재기자 송모 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해야"...현행법 요건 갖추지 않은 사람을 신분 확인 없이 체포·연행하면 위법(1.20)/ 국가인권위,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1.26)

3. 기타

송두율 교수 부인·아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1.26)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28일 (수)
제 24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2.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3.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말기 폐암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이레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가 기존의 화학요법에 모두 실패했을 경우 최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말기 폐암환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적정 가격 결정이 반년이 넘게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이 약의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정한 임시 판매가격이 한 알 당 약 8만원에 달해 환자들이 한달 평균 240여 만원이나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험마저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비싼 치료비로 가족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말기 폐암환자들에게 약값으로 한달에 24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에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국노조(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 건물 근처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고액의 약값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암투병 중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한 박용담 씨는 "1년에 항암 치료비가 1천5백만-2천만원에 달한다"며 시각을 닦으며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레사의 합리적인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의 조속한 적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누구나 암환자 혹은 그 가족의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이레사 가격의 문제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199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우리나라의 성인 남자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 AIDS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한달 평균 240여 만원에 이르는 약값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남겨져 있다. 보건의료단체들과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윤만을 앞세운 채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을 규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서 'OECD 선진 7개국의 공장출하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목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레사의 적정 가격을 6만5천원 정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이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불리기도 했던 글리벡이 비싼 약값 때문에 환자들에게 절망

의 약이 되었는데, 말기 폐암환자 역시 이례사를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사업 등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초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8인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해당기관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가 해당 기관에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를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는 한편, 진정 제출이나 진술, 증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파스모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에 해당한다면,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국가인권위가 수립하려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른 부처간 정책협약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예방 위한 소프트웨어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사 청산 4대 법안 등 이미 상정된 주요 법안의 처리문제로 시끄러운 법사위에 아직까지 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개정안 마련을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에 결합하면서 법사위원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동력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 측은 "법사위 3당 간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사전 통보 조항'의 확대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측도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평가제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의원 입법 사항이라 인권위가 나서서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상정조차 못된 채 폐기될 위기

이와 함께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훈 사무국장은 "현재의 개정안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제조약들이 국내 인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국제인권기준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평가의 범위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해당기관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16대 국회 폐파과 함께 자동폐기될 경우에는 다음 17대 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는 인권위원 선임과정이나 서면조사 우선주의의 문제, 위증에 대한 처벌 불가 등 국가인권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폭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방학을 맞아 중국에 체류중입니다. 딸아이가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중국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해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앞머리는 거의 예외없이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하루 동정으로 장식됩니다. 나머지 뉴스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지도자를 비판하거나 고위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언론의 여론수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공시절 한국의 언론이 연상됩니다.

중국에서는 국민보다는 국가 권력이 중심인 듯 합니다. 각 도시마다 가장 커창하고 화려한 건물들은 인민정부 청사입니다. 백화점 계산대에도 "군인 우선"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타 보면, 공무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도 더욱 심해지는 듯 보입니다. 호화 고층아파트와 초현대식 사무용 건물들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고 있지만, 일반 중국인들이 사는 주택들은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리에는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들이 활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이 아직 희박해 보입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불평없이 사는 데 익숙합니다. 과거의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굶주리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또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면, 중국사회도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국에도 인권운동이 확산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소위 인권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죠.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아부하기 바쁩니다.

결국 민간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중국 인권운동에 적극 나서보는 것이 어떨까요?

◎ 장호순님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29일 (목)

제 25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2.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3.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4.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되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싸우겠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7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에 앞장서 온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국내외에서 동시 개시됐다. 이날 서울에서는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연합법화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태국에서는 Thai labor campaign이 중심이 되어 노조와 인권단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네팔,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공동행동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한국 참가단의 제안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과 민중운동단체들이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세계사회포럼에서 한국 참가단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알릴 총 3만여 명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냈다. 현장에는 지난해 집회 참가 도중 강제연행되었다가 12월 30일 강제출국 당한 비두 씨가 참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 참여한 명동성당 이주노동자투쟁단 샤벌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 정부밖에 없음을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확인했다"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했다.

민중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6월 중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각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감 사용이나 구타 등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18개 국내 인권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는 대책위는 지난 16일 결성됐다.

<기사 처음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회

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속 유가족들은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2월 말부터 해를 넘겨 같은 장소에서 14일간 노숙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유가족들이 한겨울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오는 2월 9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6월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문사위의 상설 기구화와 조사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의 법률 개정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을 뿐더러 병아리 눈곱만큼 6개월, 1년 연장되었을 뿐"이라며 조사 기간의 연장과 함께 위원회의 상설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소관상임위였는데도 느닷없이 이번 개정을 앞두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법안을 반려시켰다"며 법사위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짧으면 15년, 길게는 30년'이나 되는 투쟁의 역사를 살아온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부분이 일흔이 넘은 고령인 데다가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아직 가시지 않은 추위에 떨고 정부와 거대 야당의 책임유기에 또 한번 떨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호주제 폐지" 의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 동안 호주제는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다른 성과 호적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가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등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와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2001년과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 혈통 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해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주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지난해 5월 여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라는 원칙은 지켜졌지만 일부 내용은 후퇴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애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도록 예의를 두는 정도로 후퇴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가 "가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애초 안에서 삭제됐던 '가족' 범위 규정이 현행 "호주와 구성원"에서 "부부와 그 직계혈족·형제자매"로 변경·유지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는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일부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남성 중심성·가족 개념 유지돼

하지만, 이처럼 후퇴한 법안마저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본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한 뒤 심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데도 각 당에서 당론을 정

하지 않아 정당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을 위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각 당 간사들이 아직 개표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론 정하지 못해 물거품 위기

한편 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양부모 가정을 정상으로 보는 가족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다름으로 많은 여성연대' 타리 간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개념을 지탱해온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비혼여성, 동성애 커플 등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분등록제도로써 현재 호주제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호적제도를 대신해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일인일적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타리 간사는 "행정적인 효율만 지나치게 고려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일괄해서 담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일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부·혼인부·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를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누구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 가정·정보인권 보장은 과제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권침해를 낳는 신분등록제도의 전면 수정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셈이다.

<기사 처음으로>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국제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4회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모아진다.

그렇지만 앞서의 3차례의 포럼처럼 이번 포럼에서도 여전히 결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신자유주의와 전쟁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의 중요성'이란 패널 토론에서 "논의와 행동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각국의 운동 성과를 결집시키고 중요 결정들을 선언문 형태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말이다.

다만 포럼 기간 중 네 차례의 사회활동가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사회운동과 대중 조직의 호소문'이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발표된 유일한 공식적인 논의 결과였다. '투쟁의 세계화! 희망의 세계화!'를 주장한 이 호소문에서 운동가들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동맹국들에 의한 이라크 침략에 항의하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을 3월 20일에 가질 것'과 함께 '홍콩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될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공유재, 환경, 농업, 물, 건강, 공공서비스와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투쟁 일정으로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3월 30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철폐 투쟁의 날, 4월 17일 국제농민의 날 등이 합의되었다.

포럼 기간 내내 주장되었던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반전운동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결합에 대한 요구가 이처럼 합의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공동투쟁 일정 모아내 다행

브라질에서 열렸던 3차례의 포럼이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강의형 포럼'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도포럼은 다양한 민중문화 활동을 동원한 길거리 시위와 퍼포먼스, 공연 등이 주가 된 '길거리 포럼'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풀이되는 텅 빈 세미나장보다는 길거리에서 민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포럼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화의 직접 피해 당사자격인 농민,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빈민, 불가촉천민(Untouchables) 집단인 달리트 등은 자신들의 전통 타악기와 춤을 앞세워 공연과 행진을 조직했다. 그들은 반전, 반미 구호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이렇게 그들의 춤과 행진, 연설로 행사장은 먼지와 함께 뒤덮여 열기가 높았지만, 정작 뭄바이의 민중들은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할 수 없었다. 조직위가 발행한 비표를 착용하지 않는 한 경찰이 지키고 서 있는 행사장 문을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다. 뭄바이 시

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행사장인 네스코 그라운드 입구가 컸대었다. 행사장 안에서도 인도 경찰은 긴 끈봉을 들고 열을 지어 다녔다. 경찰에 의해 몸바이 민중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었다.

행사장 밖을 벗어나면 신발도 신지 못한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가족 단위의 빈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하지만 빈곤의 심각성과 반인권성, 신자유주의에 의한 빈곤의 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 실제 주인공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반면, 행사장에서 각종 공연과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계 단체들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 소속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비단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3세계에서 민중들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번 포럼에 참가했다기보다는 서구의 펀드를 받고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사장 담 안과 밖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담 밖의 몸바이 시민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포럼에서 주장되는 세계화의 문제도, 반전의 주장도 듣지 못했다. 인도의 대중조직들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대중들을 교양하고 조직하지 못하였고, 또 그러기에는 너무 영향력이 미약하고 분열되어 있었다.

포럼에 초대받지 못한 몸바이 민중들

그러기에 인도 공산당 그룹들이 같은 기간 주최하였던 '몸바이 레지스탕스'가 세계사회포럼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유보하고 있고, 기회주의적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또 이번 포럼이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서구 단체들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서구의 단체들은 제3세계 민중들의 투쟁의 성과물들인 토지와 물, 식량에 대한 권리를 승인해 주고, 그 투쟁을 마치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위양을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2001년 다보스 포럼에 대해 처음 개최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세계적 차원의 운동을 합의해나가게 된 것은 소중한 발전이다. 이 포럼의 영향으로 유럽사회포럼이 열리는 것을 비롯하여 대륙별 토론이 활성화되고, 각국에서도 사회운동간의 연대를 높여가는 포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세계사회포럼은 내년에 다시 브라질로 갔다가 다음 해에는 아프리카로 가 더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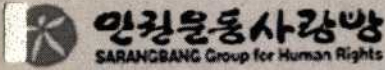
세계사회포럼의 미래는?

21일 폐막식에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계사회포럼의 성공적 폐막을 축하"했다. 하지만 축하하기에는 이르다. 포럼이 보여주는 '다른 세계'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포럼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많기만 하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30일 (금)
제 25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2. 인터넷 게시판 스톱 죄는 선거법 개혁안
 3.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4.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 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2월 24일자> 박 씨는 응시원서에 "전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 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후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경기도 지역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발표되고 몇몇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힘입어 포기하려던 박 씨의 어머니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도 교육청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

도교육청은 이달 초 박 씨의 어머니에게 보낸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서 학교측의 불합격 결정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측을 감싼 것이다. 결국 박 씨는 포천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살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접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런 사건은 '학교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는 학교규정이 허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 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나아가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것을 강제하고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국민의례를 과연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거부했던 12세 미국 소년의 용기에 비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다.

<기사 처음으로>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안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정치관련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또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인터넷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도 확대하기로 지난 19일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언론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사 처음으로>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숨겨진 세상'과 호흡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회의, 포럼, 워크숍 등의 장내 행사 이외에도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비주얼 아트 등 문화 행사들이 유달리 풍성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역시 정치적 의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영화제 상영작들은 군사주의와 평화, 가부장제 등 세계사회포럼의 핵심 의제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도 등 아시아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세계각지에서 도착한 총 83편의 작품들은 △글로벌 시장 △일과 생존의 세계 △전쟁에서의 세계 △학대당하는 세계 △삼, 정치 그리고 투쟁 △여성의 세계 △경제성 △문화/저항 △다른 세계는 숨쉬고 있다 등 10여 개의 섹션으로 나뉘져 상영됐다.

상영작 중 상당수는 이미 전보적 성격의 국제 영화제들에서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수작들이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체를 같이하며 변천해온 '회사'의 역사적 맥락을 탐방하며 그 영향력,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흥미진진한 분석을 시도한 <회사 The Corporation>,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낙인찍히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우울한 초상과 이와 비견되는 고도화된 물질세계를 포개어 놓으며 제3세계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관찰 Observations from Invisibility>, 과테말라와 베트남, 동티모르 등 죽음의 현장에 지난 50년 동안 개입해 온 미국의 외교 정책을 들추어내면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역동적인 다큐멘터리 <누구의 이익인가? In Whose Interest?> 등이 그들이다. 또한 지난 9월의 칸에서 있었던 투쟁을 담은 국내작 <킬로미터 제로>가 상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이르러서야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 5명의 사람들이 4개월 동안 다급히 준비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는 곳곳에서 빈약한 인적, 물적 조건이 만들어낸 빈구멍들이 보이기도 했다. 프로그래밍 책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상영장으로 향해야 했고, 제대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상영이 자주 중단되었다. 상영장 밖에서 3-4명의 스태프들은 관객들로부터 쏟아지는 온갖 질문들을 받고 수시로 일어나는 상영 사고들에 대비하느라 분주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영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장은 연일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영화제의 총괄을 맡은 '매직 랜턴(Magic Lantern) 재단'의 가기 센(Gargi Sen) 씨는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한 명이 열 명이 넘는 몫을 수행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작품 프로그래밍과 영화제 개최를 위한 기금 마련, 조직 운용까지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각지의 투쟁 사안들을 공간적 제약 없이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2005년 브라질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영화제를 다시 맡고 싶다"고 단언했다. "앞으로는 영화제를 조직하는 의무적인 활동가들이 좀더 많이 결합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세계사회포럼 영화제가 소비의 수단이나 고단한 일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숨겨진 세상과 호응하려는 영화들의 새로운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개관성, 여성운동, 인권」

'인권'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정회진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3.12 / 257쪽

'인권'의 보편성에 '여성인권'의 자리는 있는가? 여성운동의 실천 속에서 여성인권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보편성과 진보성은 어떻게 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평소 이런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이 책은 젠더의 시각(성인지적 관점)으로 성폭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성폭력을 다루던 시각은 '남성사회의 시선' 아래 놓여있어 여성이 경험하는 성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차원의 성차별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개념화하지 못했다. 필자들은 "여성의 말을 믿고 여성을 인식의 주체로 간주할 때" 비로소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고 역사화한다.

이에 따라 책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여성인권의 쟁점을 제기한 최근 사건 중 6개 사례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관여한 활동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한다.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미혼모 양육권 소송건, 연예인 비디오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젠더의 요소가 포함된 인권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류 여성운동 및 인권운동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여성에·비장에·남성 중심의 인권담론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하여 인권이 강자의 윤리수단이 아닌 피억압자의 무기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1월 31일 (토)

제 25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2.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폐
3.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현장에서도 도청, 사진 채종 등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해왔던 경찰이 이제는 일상적 사찰의 축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단다. 사회적 모순과 잘 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버젓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에야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사전 감시만으로는 모자랐던지 경찰은 '집회·시위 주권측에 합법적 시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산 속이나 바닷가에 나가 집회하란 말이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악 집시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 아니던가? 그런데도 경찰은 전·의경의 진압훈련을 강화하고 검거 전담 특수기동대를 확충하며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시위자는 전담수요원을 지정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협박까지 잊지 않는다.

국민의 '불만'과 생각마저 일상적으로 감시 규제하고 악법에 저항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마저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갈등 예방책'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국민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 오히려 국민 감시에 나서는 경찰력,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경찰력은 민중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 결국 좌초하고 만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다.

<기사 처음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폐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폐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거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 보도했다. 은폐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피해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단순히 피해보상 문제로 왜곡, 특별법이 마치 '보상법'에 지나지 않는 것인 양 비하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불러일으킨 분노는 30일 오후 2시 서소문 중앙일보사 맞은편 순화빌딩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날 집회에는 고양, 충북, 문경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과 관련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중앙일보사를 강력 규탄하였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제동원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법안 모두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애초에 있지도 않으며 법안 발의 시점도 01년으로 총선용으로 급조된 법안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중앙일보는 작성하고 즉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게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범국민위 이창수 특별법제정위원장과 문경양민학살피해자유족회 채의진 회장은 중앙일보사를 향의 방문해 정재홍 기자와 경제부 송상훈 차장대우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집회를 정리하기 앞서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창수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정 기자의 거듭된 사과를 받았으며, 왜곡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기사를 31일자 신문에 게재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혀 참가자들이 환호를 받았다.

한편, 내달 2일 범국민위와 강제동원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회 및 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자 유족들과 여러 단체들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1. 사회보호법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1/13).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들도 '가출소자 모임(가)'을 공식 출범시키고 폐지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국회 폐회 기간 중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폐지법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1/16).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법 폐지 권고 결정문을 공식 접수한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8).

2.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험난하지만 한발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용의 후퇴가 있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통과가 보류됐다(1/7). 결국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대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돼 관련 단체들과 유가족들의 애타게 기다렸다(1/8). 그런 가운데 갑작스레 <중앙일보>가 별다른 근거 없이 민간인학살규명법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내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1/27). 이에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등 관련단체들은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인권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한 <중앙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1/28)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30). 이제 과거사 3대 법안들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오랜 노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가스충까지 발사한 단속반원에 의해 연행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1/7). 이어 이주노동자 3명이 안산의 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감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1/9). 이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Observer는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에 돌입했고(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국내 인권단체들도 야만적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1/14) 지원대책위를 결성했다(1/16).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한국의 강제추방정책에 항의하는 각국 민중들의 서명이 이어졌고(1/16~21), 여세를 몰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국제행동주간'이 선포돼 한국과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항의집회가 시작됐다(1/29).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위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부 정책의 반인권성을 고발했

다(1/30). 한편 애초 정부는 16일부터 합동 '인간사냥'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1/7), 자진출국 기한을 2월 말로 연장하고 자진 출국시 6개월 내 재입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을 새롭게 밝혔다(1/20).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